

# 오피니언

##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 光日春秋

정진승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이 “흡연을 감소를 위하여 세계보건기구(WHO)와 담배 가격의 적정수준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시작으로 담배가격 인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반면 국무총리는 “복지부 입장에서는 검토하는지 모르겠지만 서민들이 등을 고려해 신중해야 할 문제이며, (담배가격을)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담배가격 인상에 관한 정부 고위공무원들의 상반된 의견을 들으면서 우리는 두 가지 의문을 갖게 된다. 담배가격 인상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 하는 점과 과연 행정부 내에 정책수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처 간의 이견을 조정하는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는가 하는 우려이다.

복지부가 담배가격을 인상하려는 주요 이유는 첫째, 흡연율의 감소를 통해 흡연이 주요 원인인 암, 뇌졸중, 관상동맥질환 등의 발생률과 사망률 감소를 유도하려는 것이다. 복지부는 현재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흡연율을 차지하고 있는 국내의 성인 남자 흡연율 약 43%를 OECD 평균인 30% 수준으로 낮추고, 특히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층, 여성층, 저소

득층의 흡연율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둘째, 복지부는 담배가격의 인상을 통하여 얻어지는 추가적인 수입을 일반재정의 지원 부족으로 지어지고 있는 보건·의료서비스의 확충과 질 향상에 투입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 담배값 인상과 정책조정 기능 상실

그리고 셋째, 흡연은 당사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비흡연자들에게도 건강상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외부효과를 가진 것으로 국가가 금연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즉 흡연자들은 흡연을 통하여 개인은 쾌락을 추구할 수 있어도 이들의 행위가 비흡연자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경우에는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건복지부의 주장에 대해 행정부의 관련부처, 국회, 그리고 이해당사자들은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이 갖는 이견은 담배는 습관성이 있는 기호식품으로 가격 상승이 장기적으로 흡연을 하라 효과가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담배가격 인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수입이 흡연 관련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만 국한되어 활용되지 확실치 않으며 오히려 일반재정에서 지원되어야 하는 복지부의 사업들을 편의상 담배가격 인상으로 발생하는 수입으로 운용하려는 의도가 많다는 것이다. 이는 재정의 일반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정 부처의 정책은 다른 부처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4대강 사업은 국토관리, 환경, 재정 등 관련 부처와, 그리고 국방 관련 정책은 외교, 교육, 재정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부는 관련 부처 간의 이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부처 간의 협의의 의무화하고 있으며 나아가 규제개혁위원회, 차관회의,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통하여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도록 법제화하고 있다.

최근 담배가격 인상에 관한 국무총리, 관련부처의 이견을 들으면서 과연 부처 간의 정책조율을 담당하는 국무총리실이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 하는 점과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관련부처들이 정책수립 과정에서 법에 명시된 협의과정을 충실히 지키고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담배가격 인상에 관한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이미 지난 수년간에 걸쳐 복지부

는 유사한 논리를 동원하여 가격인상을 지속적으로 시도한바 있으며, 관련부처는 항상 유사한 논리로 지연, 또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여 왔다.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논란이 되어왔던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파급효과, 담배가격의 인상이 흡연율의 감소에 미치는 영향, 담배가격의 인상으로 발생하는 추가적인 재원의 활용방안 등은 이미 국내외에 많은 사례가 있으며 부처 이기주의를 받아낸다면 단기간에 합의를 할 수 있는 과제들이다. 지금부터라도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부처 간의 협의를 진행하여 담배가격 인상 여부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고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해야 한다.

담배가격 인상과 같은 비교적 간단한 정책에 관하여도 범정부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남북문제와 같이 복잡하고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정책을 행정부 어떻게 다를 것인가? 정부가 부처 간의 협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어떻게 외부의 이해당사자들과 이미 다음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는 국회를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

정부가 강력한 흡연을 감소정책이 지연되어 수많은 국민들이 흡연으로 인하여 생명을 잃는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APEC 기후센터 소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의료 칼럼

윤승신



항문질환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치질만을 생각한다. 그러나 치질만큼 흔하게 발생하지만 치질보다 훨씬 심각하고 치료가 어려운 항문질환이 있다는 것은 잘 모르고 있다. 그것은 바로 항문 주변에 셋길이 뚫리고 구멍이 생기는 치루라는 질병이다.

항문 내에는 미끈미끈한 점액을 만들어 내는 분비선이 6~10개 정도 항문내벽을 빙둘러 위치하고 있다. 여러 이유로 이곳에 세균이 침범하게 되면 고름이 형성되고 이를 항문주위 농양이라고 한다.

이렇게 발생한 농양은 고름의 양이

농양과 치루는 질병의 진행 정도에 따라 항문을 조이는 근육인 괄약근을 깊게 침범하게 된다. 수년 전까지도 다 발생이나 깊이 침투한 난치성 치루의 경우 수술 후 재발을 참지 못하는 번실금이 매우 흔히 발생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항문 괄약근을 보존하는 수술법이 개발돼 난치성 치루에서도 괄약근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그러므로 치루 수술은 형태에 따라 수술방법도 달리해 괄약근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많은 경험과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다.

## 치루 수술은 시기가 중요하다

점점 많아짐에 따라서 약한 곳을 뚫고 주위로 퍼지게 되고, 항문주변이 빨갛게 발적되어 심한 통증과 고열이 발생한다. 간혹 농양은 피부까지 뚫고 나와 고름은 자연스럽게 배출되어 증상의 완화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 경우 농양은 재발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농양의 원인이 되었던 감염된 분비선으로 세균침투가 반복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결국 항문주위 농양의 악화와 완화가 반복되면 그곳에 염증성 조직으로 형성된 섬유성 관, 즉 셋길이 형성되게 되는데 이것을 치루라고 한다.

항문주위 농양이 발생하면 더 이상 고름이 커지지 않도록 농양을 절개하고 배출시키는 수술을 일차적으로 시행한다. 이후, 3주가 지나 치루의 형태를 띄게 되면, 근본적인 원인인 감염된 항문선을 절제해야 농양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일부 환자의 경우에는 항문주위 농양을 절개 배농한 후 치루가 자연스럽게 소실되기도 하는데, 수술 후 3주 뒤 관찰시 치루가 만져지지 않고 초음파 검사에서도 명확하지 않다면 추가적인 수술은 하지 않는다. (목포항도외과 원장)

치루는 오래 방치하는 경우 괄약근을 더 넓게 침범하거나 여러 개의 치루가 발생하게 돼 수술이 어렵고, 괄약근 손상도 피할 수 없게 된다. 더 시간이 지나면 변비가 매우 힘들 정도로 항문의 협착이 일어나며, 치루 자체에서 암의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게 된다. 결국 오래 방치된 심한 치루의 경우에는 항문 보존과 치루 수술 어느쪽도 쉽게 선택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치루는 수술의 방법뿐만 아니라 수술의 시기 또한 매우 중요한 질병이다. 치료가 늦어버린 환자는 매우 심한 변비와 배변을 참지 못하는 번실금,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다.

치질은 아무리 심하다고 해도 대장항문 전문병원이라면 거의 괄약근의 손상을 입히지 않고 수술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치루는 아무리 경미한 상태일지라도 치료를 위해서는 괄약근을 절개할 수밖에 없다. 치루는 진단시에 수술을 오래도록 미루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 치루는 괄약근의 손상을 최소화해 수술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수술의 시기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목포항도외과 원장)

## 기고

정석원



이런 휴일에는 어디로 떠나볼까? 75일 근무제도가 자리 잡으면서 휴일이면 많은 이들이 산과 들로 텐트를 들고 떠날 준비를 한다.

아영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텐트나 임시로 지은 초막에서 일시적인 야외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지만, 본질은 자연과 융화를 원하는 인간의 본능이 아닐까? 때문에 요즘에는 많은 사람이 자연을 찾아 이리저리 떠도는 유목민이 되는데 거리가 멀어진다.

아영형태도 시대에 따라 변화되어 요즘에는 오토캠핑이 주를 이룬다. 우리나라 자동차 보유대수가 100만대

하지만, 아영에 대한 기본지식이 없이 단순한 지리적 정보나, 이동의 편의성 등만을 검색하고, 유행을 쫓아 캠핑을 하다 보니 이런저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게 요즘의 현실이다. 늦은 밤 고성방가, 야영장 내 노상방뇨, 쓰레기 무단투기 등 자연을 위협하고 타인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곤 한다.

아영은 개인 공간을 추구하는 도시를 벗어나 장애물 없이 함께 공유하는 장소에서 생활하는 만큼 올바른 아영문화 정착을 위하여 몇 가지 아영예절이 필요하다.

첫째, 배려하는 마음이다. 아영장에

## 올바른 아영문화 정착

를 돌라고하고, 전국 고속도로가 개통되어 지역 간 이동이 수월해진 것은 물론, 전기와 이동식화장실, 샤워장 등 각종 편의시설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아영장들이 늘어남에 따라 과거 고생의 상징이었던 아영의 개념은 사라지고 자연 속에서 쉼과 휴식을 추구하며 아영을 즐기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내장산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가인 아영장은 주변경관이 수려하고 영지를 구획하지 않아 오토캠핑이 가능하기 때문에 찾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아영객들 사이에서 계곡이 있고 주변에 수백 년 된 갈참나무 숲과 천연기념물인 비자나무와 예기단풍을 볼 수 있고 대도시와 인접해 있어 가족단위 탐방객이 선호하는 아영장으로 입소문을 타고 아영객이 전년 대비 2배나 증가한 6000명을 넘어섰다.

## 지역 풍토·특성 살린 전통주 보급에 힘써야

약주, 과실주, 증류주 등 지역의 풍토와 특성을 살린 145종의 우리 술이 있다고 한다. 우리 민족은 역사적으로 볼 때 읍주와 가무를 즐겼다. 이에 맞춰 전국 각지에 오랜 역사를 가진 수많은 전통주들이 지역특산물로 명성을 자랑하며 전래돼 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일제시대의 주세정책과 해방 이후 식량난을 겪으면서 대다수의 전통주가 자취를 감추었다. 그 결과 약 7조 원에 달하는 국내 주류시장이 수입 개방시대를 맞아 외국의 포도주와 위스키 등에 빠른 속도로 잠식을 당하고 있어 우리 전통주가 이제는 완전히 없어질 처지이다.

그나마 요즘은 막걸리를 중심으로 전통주가 인기를 얻고 육성 방안도 나오기는 하지만 아직도 부족하다.

전통주가 잘 팔리면 지금 값이 내린 쌀의 소비도 크게 늘어날 것이고 우리 농민들에게는 일거양득이 되겠다.

전통주는 우리의 문화와 일맥상통한다. 전통주 제조와 전통술 예절은 바로 우리의 민속문화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점에서 우리 전남·북 자치단체에서는 보다 다양한 형태의 마케팅을 통해 전통주 보급에 힘써야 할 것이다.

▲노은영·목포시 석천동

## 시설

### 北 도발 '허술 대응' 여부 철저히 규명돼야

우리 정부와 군이 23일 오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허술하게 대응했다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북한이 170여 발의 포 사격을 가했는데도 대응사격은 80발에 그쳤고, 해안포 진지를 제대로, 그리고 적시에 타격하지 못하는 등 초 기대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청와대가 처음에 “단호히 대처하되 확산되지 않도록 하라”고 한 것도 적절한 대응이 아니라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북한의 첫 포사격에 대한 대응이 13분 이상 걸렸다. 이에 대해 군은 연평도에 배치된 K-9 자주포가 해상 사격훈련에 참가 중이었고 자주포 배치 지역에 포탄이 떨어지고 있어 일단 대피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군의 논리대로라면 적의 포격이 계속되면 대응사격을 할 수 없다는 것 아닌가. 참모로 여겨주니없는 해명이다.

북한은 170여 발의 포격을 가했지만 우리 측은 80발을 사격했다. 통상적인

군의 작전지침으로 통용되는 ‘2배 이상 대응사격’이라는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한 셈이다. 포격이 실시되고 있는 북의 해안포진지를 직접 타격하지 못한 것도 북한이 계속 사격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해안포는 일반적으로 제압이 안 되는 만큼 공군기를 동원해서라도 진지를 초토화시켜야 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와 군의 대응이 얼마나 허술했으면 국회에서 여당의원조차 “상황이 종료된 뒤 응징한다고 말하는 게 양치기 소년밖에 더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을까. 이래선 국민이 정부나 군을 신뢰할 수 없다.

정부는 북의 이번 만행에 대한 ‘허술 대응’ 여부를 철저히 규명해 완벽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야말로 북이 이번처럼 무모한 도발은 아예 일일 업무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언제든 신속하고 과감한 응징이 가능하도록 군사대비태세를 철저히 갖춰야 할 것이다.

### 전남 쌀 고품질인데도 '푸대접' 받고 있다니

전남 쌀이 고품질인데도 푸대접을 받고 있다. 산지 쌀값을 비롯해 유통업체의 비 매입가격과 협쌀 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낮고, 하락률 또한 폭이 크다고 한다. 이는 전남 쌀에 대한 인지도 제고 가 안 된다 막연히 ‘경기가 좋다’는 소비자들의 왜곡된 인식 때문이다.

현재 전남 도내 산지 쌀값(80kg)은 12만896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경기도(15만8648원)와는 무려 3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고, 강원(15만2296원), 충북(13만6676원), 경남(13만4224원), 경북(13만3856원)은 물론 전북(12만9428원)과 충남(12만8896원)에도 밀려 있다.

산지 유통업체들의 비 매입가격(40kg)도 전국 평균의 4만2134원보다 1848원(4만256원)에 불과하다. 전남의 협쌀(20kg) 판매가격 역시 3만2161원으로 최하위권이다.

전남 쌀이 이처럼 푸대접을 받는 이유는 무엇보다 낮은 인지도에 있다. 한

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매년 주관한 ‘전국 고품질 브랜드 쌀 평가’에서 전남 쌀이 고급 쌀로 선정된 12개 브랜드 중 7년 연속 4~5개를 차지하면서 도 전남 쌀 전체에 대해 인식 제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미에 대한 소비자들의 그릇된 인식도 전남 쌀의 저평가 요인이다. 지역의 대형할인매장에서조차 전남의 대표 브랜드를 증정용 공짜상품으로 판매하는 왜곡된 구조 또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전남도와 농협, 농민단체 등은 전남의 대표 브랜드와 연계하는 전남 쌀 홍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 특히 소비자단체가 인정받은 전남 쌀의 식감과 미질 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이미지 제고에 전력을 쏟아야 할 것이다.

농민들의 입장에서 같은 노력과 비용을 들이고도 제 값을 못 받는 게 억울한 일이고, 전남 전체로 보면 막대한 손해다. 더 이상 좌시해선 안 되는 이유다.

## 無等鼓

기억이란 묘한 것이다. 잊고 싶다고 해서 망각 되는 것도, 잊을 수 없다고 해서 기억되는 것도 아니다.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세월의 흐름에는 당해지지 못한다. 기억 속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스스로 과거를 지우는 사람들도 있고, ‘망각’이 끔찍한 형벌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리스 신화는 아테네의 젊은 영웅 테세우스가 ‘여친 사냥’에 나섰다

### 디가우저



나섰다가 빈둥뚱뚱한 얘기를 들려준다. 테세우스는 헬라스 최고 미녀 헬레네를 납치한 것도 모자라 지옥의 신 하데스의 아내까지 차지하려 했다. 그러나 망각의 강 ‘레테(lethe)’를 건너 영웅 앞에 놓인 것은 ‘망각의 의자(chair of oblivion)’.

그는 여기에 걸터앉아 이승의 추억을 빼앗긴 채 영원한 잠에 빠져들었다. 망각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 같은 권력에 의한 ‘과거 지우기’가 대표적인 사례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관실은 ‘디가우저(degausser)’라는 하드디스크 파괴 장

이었으니가. 하지만, 디가우저로도 어찌지 못한 것들이 있다. 증거인멸 과정에서 큰 대포를 쏘고도 직원이 만들어 줬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사찰팀 수첩에는 청와대 지시사항이라는 메모가 적혀있었다. 청와대 보고용 풀

더도 발견했다. 검찰은 재수사할 마음이 없다고 하지만,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이 가만들지 모르겠다. ‘권력에 대한 인간의 투쟁은 망각에 대한 기억의 투쟁(밀란 쿤데라)’이 아니던가. /김주정 여론매체부장 jnews@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錫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李康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111(가)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국독신청·매일내선))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여론매부 2200-62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전산팀 2200-685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교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6메일 opinion@kwangju.co.kr